

‘지속가능한 발전’ 실현

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정책

2005. 5. 27.

국토정책연구팀

순서

Table of 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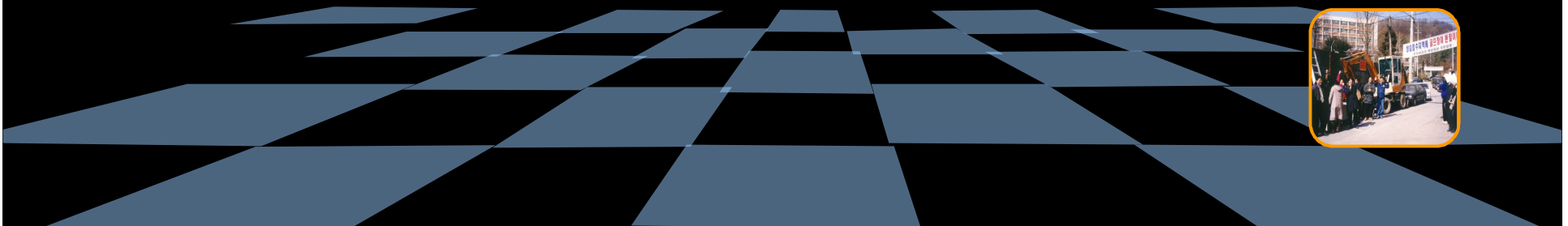
- I 문제제기**
- II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저해하는 구조와 요인**
- III 국토개발정책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**
- IV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제**
- V 향후 추진 계획**

[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]





I. 문제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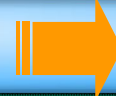


1 국토환경의 여건변화

ESS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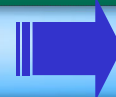


개발·성장중심 정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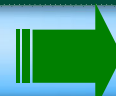
지속가능한 발전 중심 정책

중앙중심·관주도 정책



지방중심·민관협력 정책

부처별 분산추진정책



통합적 혁신추구 정책

2 환경변화에 대한 참여정부의 단편적 대응^{SD}



성장과 개발 위주 국책개발사업의 한계

❖ 지속사업 추진 난항

- 새만금, 원전수거물관리센터, 고속철도, 시화호 사업을 둘러싼 갈등 고조

❖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

- 행정복합도시, 혁신도시, 기업도시, 수도권신도시, 대단위 골프장 등

과다 개발로 수요부족 · 국토파괴 초래

❖ 사례1 :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설정

-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합계시 현인구의 40%이상 증가

❖ 사례2 : 골프장 규제완화로 대단위 골프장 추가 건설 추진

- 골프장 총수: 400~500개로 과잉 공급 우려

❖ 사례3 : 공급확대 위주의 주택정책 추진

- 전국 100.6%이상, 서울시 91.6% (주거단위 기준: 114.2%)
- 주택종합계획(2003-2012)의 과잉 주택공급계획
: 수도권 7,000만평 공공택지 공급

3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 · 사회적 비용의 증대



❖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사고 결여



❖ 사회적 갈등 확산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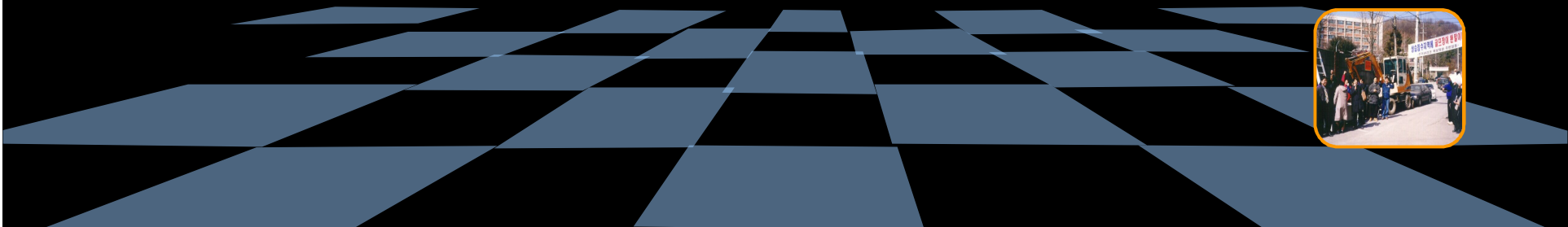
❖ 환경비상시국회의 결성 등 환경단체 문제제기 촉발



❖ 참여정부: 환경의식이 약한 신개발주의 정부로 낙인



II.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저해하는 구조와 요인



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저해 구조

ESSD



참여정부 핵심정책

- 국가균형발전
- 경제활성화

경제 및 신개발 중심 정책

경제효율성 중시

지속가능 국토
비전 부재

국토·토지정책을
경제성장수단으로 인식

이익극대화

검증시스템
미비

국토의
지속가능성 훼손





경제적 효율성 중심 정책 추진

- ◆ 경제침체 극복수단으로 건설경기 부양 시도
- ◆ 부동산 규제의 강화와 완화 반복

➡ 수요 및 환경용량을 넘어서는 개발 유발

개발주체의 이익 극대화 추구

- ◆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약
- ◆ 주민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발 요구

➡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및 성장위주의 정책 수행



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대한 비전 및 전략 미흡

- ◆ 개발용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
- ◆ 개발용지와 보전용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약



임기응변적 국토 및 토지정책 수립

대형국책사업의 검증 시스템 미비

- ◆ 정치적 · 정책적 목적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왜곡
- ◆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되는 사업평가 시행
- ◆ 현행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

III. 국토개발정책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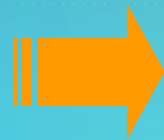


1 국토정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? ESS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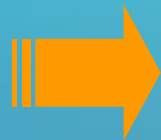
❖ 정부내 통합적 그린거버넌스 시스템 부재

- ◆ 부처별로 독자적 사업 추진
- ◆ 부처간 성과주의 팽배



개발정책이 환경정책과 별개로 진행

❖ 사회적 갈등 관리시스템 미비



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정책 시행



지속가능한 국토관리

**정책 · 사회
통합성 강화**

정책간 통합

사회적 통합

**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
통합으로 지속가능성 추구**

**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
국토 · 환경 거버넌스 구축**



❖ 정책간 통합

1.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통합성 강화 (정책과제 1)
2. 농업정책과 환경정책 통합성 강화 (정책과제 2)

❖ 사회적 통합

1. 국토 · 환경 거버넌스 구축 [정책과제 3]
2. 개발이익환수 및 규제손실보상체계 구축 [정책과제 4]

-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(정책과제 5)

IV.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제



1 과제1: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통합성 강화



국토계획과 환경 계획 연계 강화

- 계획공간단위별 연계
- 도시환경기본계획과 도시환경관리계획 신설

통합 정보망 구축

- 국토·환경정보 통합 운영
- 국토환경지도 공동 작성

집행 및 평가의 통합체계 구축

- 통합 집행체계 확립
- 통합 평가체계 확립
-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

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통합성 확보

- 환경을 국토정책의 기본인프라로 정착화
- 보전 지역: 철저히 보존, 개발할 지역: 계획적·친환경적 개발

2 과제2: 농업정책과 환경보전정책간 통합성 강화



농업환경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

- ◆ GIS자료 구축을 통해 생태적 민간지역 지정
- ◆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의 토지이용 범위 사전공지

자연순환형 농촌공간 관리시스템 구축

- ◆ 지역단위 농업환경 오염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
- ◆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
 - 친환경농업직불제
 - 가축사육두수할당제
 - 화학비료등록제



국토 · 환경수석 신설

- ◆ 개발 · 경제부처와 보전부처 간의 통합·조정
- ◆ 행정복합도시, 혁신도시, 기업도시,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조정 · 지원

지속가능 행정체계 구축

- ◆ 녹색장관회의 설치
- ◆ 국무조정실에 녹색조정기구 설치
- ◆ 정책입안 및 시행자 실명제 도입
- ◆ 국토 · 환경 전문직 확보 / 순환보직제 재검토
- ◆ [장기과제]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통합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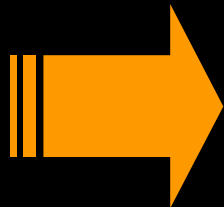


중앙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(심의기구)

- ◆ 주요 국책과제의 지속가능성 검증
- ◆ 사회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

이해 당사자간 파트너쉽 강화

- ◆ 전국적 환경네트워크 구축
- ◆ 각종 심의기구에 주민·시민단체 참여확대



국토정책을 경제부처로부터 독립



녹색분권 실현기반 구축

- ◆ 지역별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준 설정
- ◆ 자치단체별 녹색성과(Green Performance) 평가 및 보조금 지원

지속가능한 국토지표 설정

- ◆ 국토관리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
- ◆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장기적 비전과 방향 제시
- ◆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

● 지표작성주체 : 국책연구기관의 참여 하에 지속가능위원회 주관

● 제도개선 : 국토기본법에 국토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도입

4 과제 4: 개발이익환수 및 규제손실보상체계 구축

- ◆ 토지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는
 -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
 - 동시에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재원확보
- <양도소득세만 존재> - 토지초과이득세 : 1998년 폐지
- 개발부담금제 : 2004년 사실상 폐지

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

- ◆ 양도소득세제 운영의 정상화 → 실거래가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
 - 양도소득세를 사전공지하는 공영주택 시범운영 등 (예, 판교신도시)
- ◆ 개발부담금제 재도입/확대 시행
- ◆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정비·강화 → 계획적 개발 유도

개발이익 환수 재원으로 규제손실 보상

- ◆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해결
- ◆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억제지역 토지 매입 혹은 보상

규제손실의 보상방안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



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기반 마련

- ◆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
- ◆ 환경협력사업 발굴 및 기본합의서 체결 추진

친환경적 경제협력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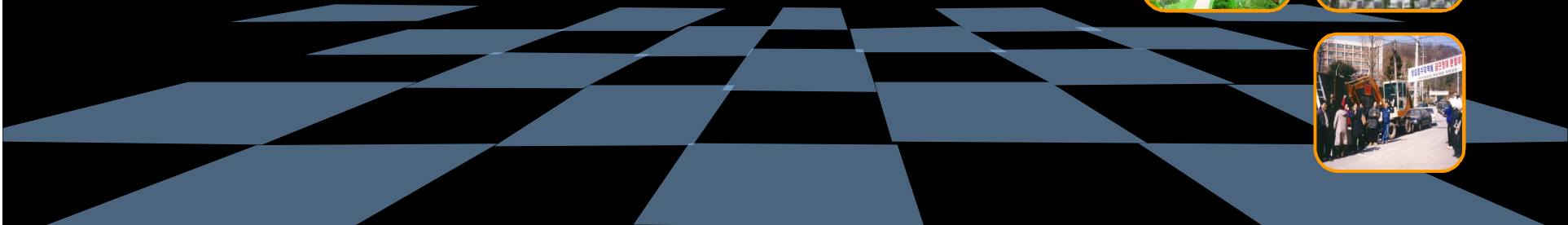
- ◆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
- ◆ 대북 진출사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
- ◆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 지원

북한의 산림복구 및 생태복원 지원

- ◆ 북한 산림 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
- ◆ 비무장지대, 백두대간 등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
- ◆ 북한의 환경개선투자 지원



V. 향후 추진 계획





정책과제별	세부내용	추진일정				주관 기관	
		'05	'06	'07	'08		
1.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	국토관련 행정·개발계획 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	전략환경평가 실시					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산림청
		사전환경성 검토, 영향평가 등 평가체계 일원화					
		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					
	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	계획수립 주기 및 체계개선					
		통합국토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					
	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						



정책과제별	세부내용	추진일정				주관 기관	
		'05	'06	'07	'08		
1.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	농촌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자원의 관리	농업계획 기준마련	→				농림부 기획예산처 환경부
		농촌·농업환경자원 DB 구축	→				
		지역별 양분총량관리제 도입	→				
		생산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지원·보상 프로그램 강구	→				
2. 개발이익 환수 및 규제손실 보상체계의 구축	농촌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자원의 관리	개발부담금제 재도입	→				재경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림청
		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정비	→				
		양도소득세의 단계적 정상화	→				
		개발권양도제 도입	→				
	세부방안 검토	1단계 도입	모든사업 포함	→			
세부방안 검토 및 도입	→						
세부방안 검토	시범사업 확대 실시	→					



정책과제별	세부내용	추진일정				주관 기관	
		'05	'06	'07	'08		
3. 국토·환경 거버넌스 구축	국토개발과 환경정책간 통합조정체계 구축	국토·환경수석 비서관 신설	세부방안 검토 및 도입				지속위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
	녹색정책조정회의	세부방안 검토 및 도입					
	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 강화	개발관련 심의기구 주민·시민단체 참여 확대	세부방안 관련 검토 법령개정				건교부 환경부 지속위 행자부 등
		중앙·지방지속위 기능강화	세부방안 관련법령 검토 제개정				
	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평가체계	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지표 개발·적용	지표 검토 제도 정비 시험 적용 확대 실시				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행자부 등
		국토관련 주요정책 ·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	세부방안 검토 도입				
		자치단체 지속가능성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	세부방안 검토 도입				



정책과제별	세부내용	추진일정				주관 기관
		'05	'06	'07	'08	
4.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	남북한 환경협력추진 기반 마련	세부과제 발굴 및 단계적 추진				환경부 통일부 건교부 재경부 산림청 등
	친환경적 경제협력 사업추진	관련제도 개선				
	북한의 산림복구 및 생태복원 지원	세부방안 마련				

A large, 3D topographic map of South Korea is centered on the slide. The map uses a color gradient from green to brown to represent elevation and is overlaid with a black grid. A semi-transparent orange rectangular box is positioned in the center of the map, containing the text '감사합니다'.

감사합니다